

‘다스 실소유주’·‘뇌물 대가성’ 쟁점...치열한 법리 공방 예상

미리 본 MB 재판

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은 치열할 전망이다.

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이르면 4월 초, 늦어도 4월 중순에는 그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. 그 경우 5월부터는 재판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.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그동안 ‘꼬리표’처럼 따라붙었던 ‘다스’는 누구 것인가란 질문이 역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.

검찰은 각종 증거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다. 이를 기반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과 횡령,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.

대표적으로 검찰은 다스가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투자자대표를 상대로 매년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할 때 삼성전자가 소송비 500만 달러(약 60억원)를 대납한 것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규정했다.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와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. 아울러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 관여 속에서 300억원대의 비자금에 조성한 것으로도 파악하고 있다.

이 전 대통령은 그러나 14일 검찰 조사에서 “다스는 나와 무관하다”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.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도 같은 태도를 취하며 ‘방어전’을 펼 것으로 보인다. 다스의 설립과 운영에 이 전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했고 차명의로 지분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들의 검찰 조사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 이 경우 증거로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김성우씨 등 다스의 전 핵심 경영진이나 이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진술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.

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으면 상당수 혐의는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.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

특활비 등 실무진에 떠 넘기고

검찰 조사 혐의 대부분 부인

유죄 인정땀 10년 이상 중형 예상

결정적 물증이 승부 가를 열쇠

상남이나 민간 부분에서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, 대가성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.

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지난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행의 ‘방조범’(중범)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 전 대통령을 ‘주범’으로 규정했다.

이 전 대통령이 당시 김성호·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제공을 요구했고 김 전 기획관이 이들 중간에서 ‘전달자’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. 김 전 기획관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진술했다.

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‘청와대 참모진들에게 특활비를 사용하라고 지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’는 입장으로 알려졌다. ‘지시한 자’와 ‘지시를 받은 자’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법정에서 두 사람의 대면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.

만일 재판에서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가정하면 이 전 대통령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. 뇌물수수 범행만 하더라도 수수액이 1억원이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하게 돼 있다. 대법원의 뇌물죄 양형기준을 따르더라도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11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 권고된다. 횡령 범행도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, 이득액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.

결국, 얼마나 결정적인 물증이냐 진술이 뒷받침되느냐에 따라 범인의 혐의 인정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. 검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진술이 바뀌거나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시하는지 여부 등도 재판 상황에 돌변 변수가 될 수 있다. /연합뉴스



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. /연합뉴스

남북정상회담·지방선거 등 현안 고려 사법처리 속도속결

검찰, 측근 진술·물증 이미 확보

이르면 내달 초·중순 재판 넘길 듯

110억원대 뇌물수수과 다스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(77)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향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결정을 서두를 것으로 관측된다.

이미 수사가 비교적 많이 진행된 데다 4월 말 남북정상회담과 6월 지방선거 등 중대사를 앞둔 점도 검찰이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 시기를 정하는 데 고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.

15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금주 중 이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및 기소 시점 등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. 문 총장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을 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

서울중앙지검의 보고와 문 총장의 검토 과정을 따져 보면 다음 주중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.

이 전 대통령 수사는 올해 1월 가속이 붙은 이후 측근들의 잇따른 구속과 물증 확보로 수사진척이 빠

르다는 평가가 많다. 이 때문에 검찰이 보강 수사에 긴 시간을 쓰지 않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속도감 있게 정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. 만약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, 법원이 발부한다면 1차 구속 기간인 10일을 넘기지 않고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온다.

법조계에서는 영장 청구 여부가 큰 변수가 되겠지만, 다음 달 초·중순에는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. 경우에 따라서는 이르면 이달 말 기소까지 하지 않겠느냐는 계산을 내놓기도 한다. /연합뉴스

국민 10명중 8명 “MB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해야”

국민 10명 중 8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(MB)을 전직 대통령 예우 보다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1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날 tbs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(신뢰 수준 95%에 표본오차 ±4.4%포인트) ‘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’는 의견이 79.5%였다. ‘전직 대통령이므로 예우해야 한다’는 의견은 15.3%에 그쳤다.

리얼미터는 “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, 연령, 정당 지지층, 이념 성향에서 이 전

대통령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”고 전했다.

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(엄정 처벌 96.7% vs 대통령 예우 3.0%)과 민주평화당(93.4% vs 6.6%), 정의당(88.3% vs 5.8%) 지지층에서 ‘엄정 처벌’ 응답이 90% 전후를 기록했다. 바른미래당(67.7% vs 19.3%) 지지층과 무당층(75.5% vs 13.1%)에서도 엄정 처벌 응답이 우세했다.

반면 한국당 지지층(38.0% vs 50.0%)에서는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달했다. /김형호기자 khh@연합뉴스

형 이상득 불법자금 수수 조사 받아 아들 시형씨 다스 횡령 공범 적시

15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마친 가운데 그의 측근 인사와 친인척도 조만간 사법처리 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.

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에 앞서 범죄 연루 정황이나 혐의점을 두고 수사를 벌인 측근과 친인척은 공개적인 수사를 통해 이름이 알려진 이들만 20명에 달한다.

각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측근들의 면면을 훑어 보면 이 전 대통령의 ‘멘토’로 불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부터 재산관리 등 굵은일을 맡은 ‘가신’

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·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까지 범위가 넓다.

친인척 중에서는 부인인 김윤옥 여사를 시작으로 아들 이시형씨,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작은형 이상득 전 의원, 조카 이동형·김동혁씨,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등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.

이들 모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수는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. 김 전 기획관이나 이병모 사무국장, 이영배 금강 대표 등 일부 측근은 구속수사 기한이 만료돼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.

이 밖에 도 박재완 전 정무수석, 돈을 건넨 김성호·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. 불법 자금수수 의혹 사건에는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씨도 등장한다.

측근 인사 중에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, 최시중 전 위원장, 천신일 세종 회장,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,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등이 이 사건에 연관돼 압수수색 대상이 되거나 소환 조사 등을 받았다.

이상득 전 의원은 특활비 수수 의혹 외에 민간 부문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 7일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.

다스의 경영비리와 관련해서도 많은 친인척과 측근들이 수사를 받았다.

검찰은 최근 다스 자회사와 관계사에서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. 다만 김 여사의 사법처리 가능성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. /연합뉴스

밝은광주안과의 새이름

신세계안과

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(현 의료진 그대로)

-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
- 3D스마일수술 15,000건 기록 (2018년 2월 28일 기준)
- 레이저 다초점 노안, 백내장 교정술 시행

1566-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

oticon PEOPLE FIRST

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

“한 달간 보청기 무상 대여”

-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
- 모든 방문 고객 선물 증정
- 보조금 전용 보청기
- 무료 청력테스트
-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

64채널 충전형 보청기 호환 출시!

오티콘 OPN은 충전형 보청기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 가능

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
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, 1층(102호)

062-364-8800